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 위해 검증 또 검증을

■ 6·13 선거서 뽑힐 '지역 일꾼들'

시·도 광역단체장	2명
시·도 교육감	2명
자치단체장	광주 5명·전남 22명
광역의원	광주 23명·전남 58명
기초의원	광주 68명·전남 243명



지역 살림과 각종 지역별 맞춤 정책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지역 일꾼들 제대로 뽑자

민주당 후보 과밀...중앙정치 매몰 우려
지역 세력화에 지방의원 높은 진입벽
정당들 '아카데미' 통해 인력 확보 나서
정당보다 인물·연고보다 공약 살펴야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광역단체장 2명, 시·도 교육감 2명, 자치단체장 27명(광주 5명·전남 22명), 광역의원 81명(광주 23명·전남 58명), 기초의원 301명(광주 68명·전남 243명) 등 모두 413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후보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구별로는 각 후보들의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후보들이 넘쳐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옷을 입은 많은 후보들이 경쟁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일부에서는 '혼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경선은 유권자의 표심이 아닌 100% 관리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만큼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이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뒷받침한 채 관리당원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에 주력하는 행태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자칫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를 무조건 찍는 것 보다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꼼꼼하게 검증,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 후보 자질 꼼꼼히 따져야

광주·전남 지역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40%가량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도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공

직선거법 위반, 부동산법 위반, 사기·횡령 등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심사를 통해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내느라 철저한 검증을 한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들이 자격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성을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

민주화 운동 과정 전과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범죄금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도 더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만 무조건 찍는 것 보다는 후보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정당 보다는 인물 우선되어야

이번 지방선거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 독점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년에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는 대부분 민주당 전치로 끝났다. 진보정당 비례대표들이 일부 진출했다.

이 때문에 집행부 수장(단체장)이 같은 당이어서인지 견제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초의원 선거가 2~3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원 진출이 이뤄진 것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지역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토론 등이 이뤄져야 지역발전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고주의 벗어나야

선거에서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표를 찍는 것은 오랜 약속이다. 3가지 연(緣)을 중요시하는 게 한국적인 정(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약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시군에서는 연고주의 선거가 더 극심하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학연과 지연·혈연에 묶여 '고정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과 인물 대결을 해야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와 시민단체도 연고주의 탈피를 통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권유하고 있다.

• 정당, 새 인물 수혈 노력을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대부분 기초의회를 거쳐 광역의회로 진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광역의원을 한 뒤 자치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번 광주시의원 선거와 전남도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경선 후보 대부분이 기초의원을 지낸 뒤 시·도의원 도전에 나서고 있다. 기초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은 뒤 더 큰 광역의회로 진출하는 게 당연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지역별 선거구에서 정치적 기반을 잡은 뒤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는 게 보편적이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정치세력화를 하고, 이를 자산으로 삼아 매번 선거에 나선다.

특히 지역구 및 당원 관리를 통해 재선·3선 등 선수를 쌓아가고 있는 지방의원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은 높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당들은 정치 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관리당원 투표 100%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미 지역에서 정치세력화를 한 기존 정치인들을 무너뜨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의원 선거 경선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초의원을 거쳐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상당수이며, 전문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풀'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가 아닌 평소에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과 여성들의 진입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투표 참여가 지역발전 이끈다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지역살림을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방의 실행과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7.1%의 투표율을 보이며 과반을 넘었지만, 앞선 2회(45.1%)·3회(42.3%)·4회(46.3%)·5회(49.8%) 지방선거는 5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은 1회 지방선거에서 76.1%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후 64%~6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제6대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